노동자 연대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wspaper.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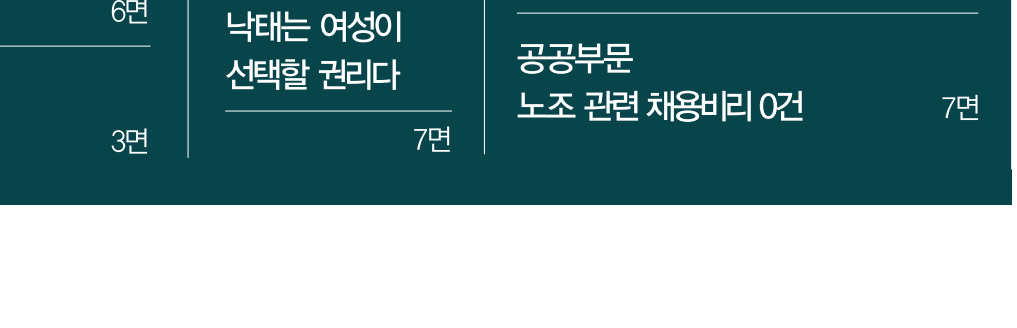
제277호 | 2019년 2월 28일 ~ 3월 5일 | 값 1,000원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0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사업자 명칭 :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 노동자 연대 발행 연월일(창간호) :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병동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인도 파키스탄 전쟁
자본주의의 야만을 보여 주다



관련 기사 4, 5면

핵무장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4면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3면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간섭 말라 8면

3·1운동의 진정한 성격과 오늘을 위한 시사점 6면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3면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7면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2면

공공부문 노조 관련 채용비리 0건 7면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정선영

최근 통계청의 두 발표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분)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퍼센트(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퍼센트 감소했다.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42.6퍼센트에서 2018년 4분기 28.5퍼센트로 줄었고, 근로 소득은 가구당 월 68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36.8퍼센트나 감소했다. 즉, 실업 증가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반면 상위 20퍼센트(5분위)의 소득은 10.4퍼센트 증가했다. 상위 20퍼센트로 뭉뚱그려져 있지만, 그중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 폭이 특히 크다. 예컨대 지난해 10대 재벌 총수의 배당금은 42.4퍼센트나 늘었다. 이건희는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도 배당금이 55퍼센트 증가해 4748억 원을 가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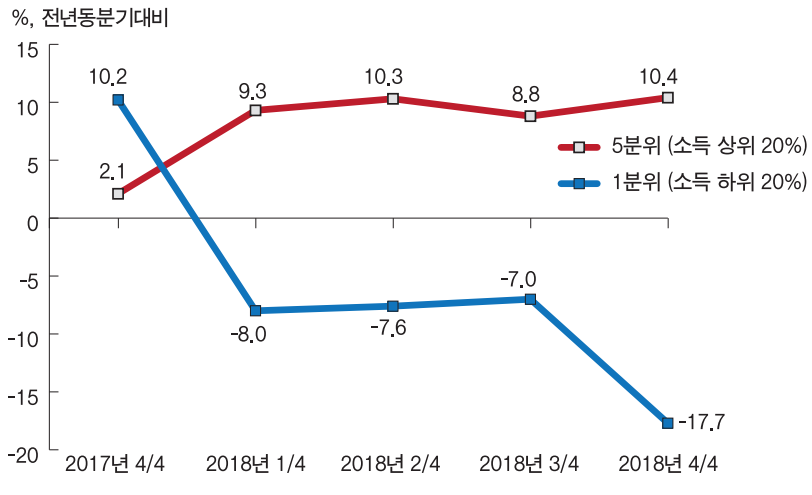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크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격차 지수는 소득 격차의 3배 수준이다. 예컨대 10대 재벌의 자산은 2011~2018년 사이에 70퍼센트나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10퍼센트 줄었다. 일각에서는 소득 격차 증대를 두고 노동자 내 임금 격차를 강조한다. 그러나 실상은 계급 간 격차 증대가 불평등을 낳는 핵심 원인인 것이다.

이런 불평등 증대에서 실업 문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월 15~64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5000명이나 줄었다.

사진 조승진

최악의 실업난 속에 깊어지는 청년들의 한숨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이를 두고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낳은 결과라며 제 논에 물 대기 식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리만 요란했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줬다 뺏기 식으로 개악해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남긴 세금이 지난 2년 동안 매해 10조 원이 넘었다는 것에서 보듯,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균형재정 논리에 입각해 사실상 긴축 재정을 폈다.

게다가 임금 인상 때문에 곧장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참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고용 상황은 전체적인 경기 상황과 이윤율,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가들의 투자로 결정된다.(임금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일 뿐이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4.2퍼센트 감소해, 2008년(−4.8퍼센트) 이후 최대였다. 지난해 평균 제조업 가동률도 72퍼센트대로 2008년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조선업과 한국GM 구조조정에서 보듯 자본가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했다. 즉, 전 세계적인 불황과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정책이 '고용 참사'의 핵심 이유이다.

부의 축적, 빈곤의 축적

양극화와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은 자본주의에서 "한편에서는 부의 축적이,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축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 마르크스의 말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흔히 마르크스의 주장을 노동자들의 '절대적 빈곤'이 커진다는 식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생활 수준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조차 상대적 빈곤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가들이 이윤 경쟁을 위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 애쓰고, 이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 등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를 더 빨리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 생산수단의 양에 대비한 노동량의 감소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손에 축적된 자본이 늘어날수록 고용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절대적이 아니다) 감소한다.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이 취업자에게 압박을 강화해 "취업자는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처럼 오늘날 한편에 거대한 실업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김용균 씨처럼 부족한 일손으로 무리하게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를 낳은 신자유주의에 대처하겠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공약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내팽개쳤다.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했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하자마자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또다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아 '허울뿐인 정규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온 이후 열린 긴급회의에서도 정부 관계자는 "민간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규제혁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다시 경제 성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낙수 효과' 론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실패로 드러났다.

불평등과 실업을 완화하려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제대로 된 복지 확대 등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거부할 때 이런 대안을 더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다. 이윤이 아닌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투쟁과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

화성 학교 청소년 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하라

강철구

화성시 민간위탁 학교 청소년 상담사 해고 철회 투쟁이 두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과 해고된 청소년 상담사들은 경기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1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김선희 씨는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해고 직전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중3 학생을 상담했습니다. 내가 일한 화성의 발안중학교는 다문화 학생들도 많고,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된 노동자들은 곧 개학하면 상담실을 찾아올 화성 지역의 학생 2만 5000명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과 화성시는 학교 비정규직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과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면담을 요청하는 노조의 공문조차 받지 않고 있다. 청소년 상담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과 학교장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상시 지속 업무를 해 왔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파렴치하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 서철모는 청소년 상담사들에게 2년 후에는 고용 안정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가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40명을 단칼에 해고했었다. 그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노한 해고 노동자들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야말로 상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 해고는 문재인 정부 책임도 크다. 말로만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외치면서 민간위탁을 유지하고 있고, 집단 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이 투쟁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투쟁의 일부다. 화성시 민간위탁 청소년 상담사들의 해고 철회 투쟁이 승리하면 다른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화성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쉽게 들어 주지 않는 것이다.

연대가 더 확대돼야

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경기도당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당사 농성 일주일이 돼서야 나타나서는 왜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냐는 노동자들의 항의에 뻔뻔하게 답했다.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는 차이가 있다. 지방이 중앙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갑질이다."

해고자들이 굴복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해, 화성시청 노숙농성, 오체투지, 경기교육청 농성 등을 이어 오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해고 철회 투쟁에 발벗고 나서면서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교사가 해야 할 일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놓고는, 무책임하게 해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투쟁을 이끌고 있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것에 맞선 투쟁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청은 상담사, 복지사 등 학교에서 확대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일부를 지자체 민간위탁으로 떠넘겨 왔고,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성지현 지부장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다른 직종에서 비슷한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투쟁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주관한 2월 21일 오체투지 행진 및 결의대회에는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GM대우 비정규직지회, 현대모비스 화성지회 등 금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변혁당 경기도당, 노동당 경기도당도 연대했다.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은 화성공장에서 지지 인증샷을 찍고, 모금을 해서 전달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회원들은 2월 23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지지 리플릿을 배포하면서 연대를 호소했다. 2월 26일에는 화성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교육청에서 집단 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2월 28일에는 경기교육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 주최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파업 투쟁 요구안에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을 포함시켰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화성 청소년상담사 해고 철회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5·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김문성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 · 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 · 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지도부 선거 후보라며 징계를 미뤄 버렸다. 이들 망언자 두 명은 후안무치하게도, 표를 몰아줘 자신들을 지켜 달라고 선거 내내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황교안 대세론 속에서 김진태는 3위로 낙선했지만, 김순례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황교안도 공안검사 출신으로 우파의 지지를 받아왔으니 한국당의 우파 본성이 드러난 셈이다. 망언 의원 셋의 의원직 박탈은 계속해서 쟁점이 될 듯하다.

지금 한국당 규탄과 망언 의원 제명 여론은 2년여 전 박근혜 탄핵 여론과 비슷하다. 말 그대로 범국민적 여론인 것이다.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기대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배경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은 본지가 이미 지적했듯이, 북한군 개입설이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반동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2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5 · 18 망언 규탄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해 분노를 표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망언 의원 국회 퇴출과 한국당 해체를 외치며 광화문 일대를 행진했다.

이날 집회에는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들도 참가했다. 그전 주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광주 지역 단체들도 대거 참가했다.

5 · 18 유공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진보 정당들과 더불어민주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장 · 전남도지사도 상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을 환영하며 민주주의 훼손 세력에게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집회에서는 지만원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시 시민군 출신 곽희성 씨도 발언했다. 그는 자신과 두 아들이 모두 군대를 만기 제대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북한군이냐고 반문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항쟁의 주역이었고, 우익의 공세가 바로 이런 이들을 모욕하는 것임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었다.

민주노총과 진보단체 활동가들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장소(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도 한국당 해체 등을 외치며 항의 행동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일관되지 않다. 전두환 · 노태우를 풀어 줬을 뿐 아니라 그 두 자를 청와대로 불러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 환대한 정부가 김대중 ·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도 반민주적 판결로 처벌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면 · 복권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석방을 하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비민주적인 이런 행보들이 바로 우파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돼 왔다.

사진 출처 서울진보연대

광주 학살 세력 후신 정당의 5·18 모욕 참을 수 없다 5·18 망언 규탄 집회, 2월 23일 서울 청계광장

5·18 망언과 우파, 한국당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바로 군부 독재의 총칼에 맞서서 1987년 이후 노동계급 투쟁이 쟁취한 것이다.

그전, 광주 민중의 항쟁은 이후 민주화 운동의 큰 정신적 동력이자 전통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되고 계승돼야 할 위대한 전통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광주 학살이 잘못이고 광주 시민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우파의 북한군 개입설은 이런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당의 친박 우파 정치인들이 이런 북한군 개입설을 공식 정치의 장으로 끌고 들어온 배경에는 최근의 정치적 양극화가 있다.

친박 우파는 박근혜가 임기 중에 쫓겨난 것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한 정치권력이 전 사회적으로 관철되는 나라이다.

김진태 등의 행태는 양극화의 오른쪽 축이 한국당을 매개로 표현되는 한 방식이다.

이에 대한 광범한 민주적 반감이 표출된 것은 촛불 운동의 효과가 아직도 공식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대중적 압력 때문에 바른미래당조차 한국당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대중 항의 투쟁에 밀려 정권을 빼앗기고 급속히 약화됐던 한국당은 그동안 공식 정치 바깥의 우익 지지층에 의존해 기력을 회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려 왔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노골적으로 진보 개혁 염원을 배신하며 친기업 · 반노동 기조로 기울자, 실망한 진보 염원층이 가을부터 급속히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당이 옛 지지층 일부를 복원하면서 점차 기력을 회복했던 배경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5 · 18 망언으로 역풍을 맞은 것이다. 한국당의 전신들은 전통적으로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 지위를 유지해 왔다. 촛불은 바로 이에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박근혜의 부패한 통치에 염증을 느껴 중도층마저 이탈했다.

조중동 등 우파 언론들과 한국당 소속인 대구시장조차 5 · 18 망언을 비난한 이유다. 중도층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 전당대회에선 우파 성격이 두드러졌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과 태극기부대 대표를 자임한 김진태의 표를 더하면 70퍼센트이다.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도 당 지지의 확장성을 두고 한국당의 내분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지배계급의 제1선호 당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대중 운동의 표적이기 때문이다. 황교안이 경선 막판에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이는 최근의 손석희 비방과 연결돼 있다), 박근혜 탄핵 부당론 등에 동의한 것은 이 자들이 국민 대중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거의 외계인 같은 존재임을 입증한다.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김지윤

문재인 정부가 3 · 1절 특별 사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 · 시민 · 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포함해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도록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역겨운 5 · 18 망언을 비판하고 광주 항쟁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우파 정권의 정치 탄압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위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좀처럼 믿을 수 없다. 두 사람의 사면을 극렬히 반대해 온 우파들의 기를 살려 주는 꼴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 경제인 ·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일반적인 정치인과 성격이 다르다며 사면 제외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구속 수감은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었다. 그는 동료들과 토론을 했을 뿐인데도 마녀사냥을 당하고서 형법상 내란 선동 조항으로 6년째 수감 중이다. 더군다나 이석기 전 의원 탄압과 여기에 밀접히 연관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사법 농단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경우에 '7대 시국사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청와대 설명은 궤변일 뿐이다. 한상균 전 위원장의 구속 사유는 민중총궐기 조직이었다. 민중총궐기가 바로 그런 우파 정부의 악행들에 맞선 투쟁들을 모아서 대변하고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번 사면 발표에 "실망스럽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단 한 명의 양심수도 형기를 앞당겨 석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이 이번 사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오죽 부끄러우면 사면권자 스스로가 입을 다물었을까 생각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중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7대 종단 수장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엄동설한에 2만 명이 모여 외쳐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촛불정부라는 호칭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대변인(정호진) 논평에서 한상균 위원장 제외를 "아쉽다"고 평했다.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 제외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석기 전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부끄러운 과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 사건에는 애초 알려진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과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에 쌍용차 파업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소수만 포함돼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심수와 우파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은 이들이 모두 사면돼야 한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

핵무장국들이 카슈미르에서 격돌하다

김준효

핵무기 강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을 공습했고, 파키스탄군은 인도 공군기를 격추했다.

이번에도 카슈미르 지역이 갈등의 핵심이 됐다. 카슈미르 지역은 약 1200만 명이 사는 곳으로, 인도 · 파키스탄 양국이 지난 세기 두 차례 전쟁 끝에 분할 점령한 화약고 같은 곳이다. 양국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카슈미르 문제를 빌미 삼아 힌두 민족주의를 부추기거나(인도) "힌두교도의 지배"에서 "무슬림"을 구출하겠다며(파키스탄) 상호 갈등과 자국민 억압을 정당화해 왔다.

이번 격돌은 2월 14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차량 폭탄 공격으로 촉발됐다. 이 폭탄 공격으로 인도 중앙예비경찰부대(CRPF) 소속 경찰 최소 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계 무슬림 저항 세력과 연계된 카슈미르 무장 세력 하나가 폭탄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처했다.

사건 직후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정치인들은 험악한 말들을 쏟아냈다.

인도의 강경 우파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즉시 보복을 선언했다. "눈물 한 방울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모디는 파키스탄과 분쟁으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우파 여당 인도국민당(BJP) 지지 유권자들의 기세를 올리려는 속셈을 품고 있다. 특히 얼마 전 노동자 1억 5000만 명이 파업하고 여성 수백만 명이 대중 시위를 벌여서 더욱 그렇다.

인도군 수뇌부와 언론의 '전문가'들은 신이 나서 복수전을 떠들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인도 공군은 카슈미르 지방의 인도 · 파키스탄 경계선인 '통제선'을 넘어 "외과수술식" 폭격을 가했다. 1971년 전쟁 후 48년 만의 일이다. 이에 더해 인도 특수부대가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인도 언론은 이 작전들이 더 큰 전쟁의 서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 안에서도 폭탄 공격에 대한 보복이 일어나고 있다. 극우 폭력배들이 인도 전역에서 카슈미르 출신 무슬림을 표적으로 폭력 행위를 벌이고 있다.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은 파키스탄 군부는 자살 폭탄 공격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인도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파키스탄은 보복을 생각으로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복할 것이다." 27일 새벽(현지 시각) 파키스탄군은 인도 공군기 2대를 격추하고 불타는 비행기 잔해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전투기 3대도 인도 영공에 진입했다가 요격당해, 양측 모두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

쟁투

지금 두 핵보유국이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언론들은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양국 군대 수십만 명이 대치하는 곳에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냐며 애써 안심하려 한다. 그러나 양국의 무모한 행동이 아차 하는 순간에 전면전의 불길로 번질 수 있다.

인도 · 파키스탄 충돌은 세계 열강이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더 거대한 지정학적 쟁투의 일부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파키스탄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자원에 손을 뻗치려 한다. 중국은 발전소 건설, 파키스탄의 심해항 과다르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2000마일의 도로 건설 등 여러 초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뉴델리 지역을 두고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는 등 인도의 오랜 적국이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파키스탄이 인도의 지배 하에 놓이지 않기를 바란다. 인도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의 핵심 동맹국이었고, 오늘날에는 중국에 맞서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굳게 맺고 있다.

인도 · 파키스탄 정부는 양국 대중의 삶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 각각의 동맹인 중국과 미국의 지배자들도 마찬가지다.

끝날 줄 모르는 군사적 갈등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남아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국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계급투쟁 속에 서로 단결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카슈미르가 인도에 속할지, 파키스탄에 속할지, 아니면 독립국이 돼야 할지를 카슈미르인들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도 · 파키스탄 양국은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카슈미르 지방을 카슈미르인들에 돌려 줘야 한다.

인도-파키스탄 충돌은 세계 열강이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더 거대한 지정학적 쟁투의 일부다.

카슈미르 분쟁의 기원

인도와 파키스탄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2002년에도 하마터면 핵전쟁이 날 뻔했다. 카슈미르 지역은 바로 양측이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여 온 곳이다. 이 글은 2002년에 쓰였지만, 현재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한다. [ ] 안의 말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

서맨서 애슈먼

1947년 영국 지배계급은 인도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영국의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술에 따라, 독립 이후 인도 아대륙은 두 독립 국가, 즉 인도(세속적이라 여겨지는)와 파키스탄(무슬림들의 고향)으로 분열했다. 파키스탄은 1000마일이나 되는 인도 영토가 가운데 끼어 서쪽 날개와 동쪽 날개로 나뉜 괴상한 모습이었다. 이 상태는 1971년까지 지속되다가, 1971년 격동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동파키스탄이 떨어져 나와 방글라데시가 됐다.

인도 아대륙의 분할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인도 아대륙의 분할은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이끌던 무슬림연맹이 1940년부터 주장한 소위 '두 국가'론에 근거한 것이다. 두 국가론은 무슬림과 힌두교도를 서로 별개의 민족으로 본다. 인도 아대륙은 테러가 벌어지던 와중에 분할됐다. 분할 과정에서 벌어진 상호 살육으로 100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새로 생긴 국경선의 이쪽이나 저쪽으로 이주해야 했다.

그러면 카슈미르는 어떻게 됐을까? 카슈미르는 호수가 여기저기에 있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인도 북쪽에 위치해 있다.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 중국과 맞닿아 있고 옛 소련과는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 있다. 카슈미르는 역사적으로 이곳을 통치하는 세력의 방벽 구실을 해 왔다. 인구의 대다수는 무슬림 농민들로, 힌두교 도그라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농민들은 대체로 파키스탄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무슬림들이었다. 카슈미르 독립군 지도자는 셰이크 압둘라였다. 압둘라는 카슈미르인 다수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개혁을 하고자 한 세속적 사회주의자였다. 압둘라는 인기가 좋은 인물이었는데, 진나의 파키스탄에 반대했다. 지주와 군부가 지배하는 파키스탄이 토지개혁 등 사회적 · 정치적 개혁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옳은 걱정을 했다. 한편, 분할 과정에서 편자브 지역에서는 힌두교도, 무슬림, 시크교도들이 서로 살육을 벌였고, 무슬림연맹은 카슈미르에서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야 할까?

인도 아대륙 분단으로 탄생한 두 국가에게 카슈미르는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제기했다. 카슈미르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진나의 두 국가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또한 무슬림이 대다수인 주가 인도에서 버텨 내지 못한다면 인도 국민회의 지도자 네루의 세속적 인도 국가 전망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아니었다. 새 국가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토의 확보. 카슈미르로 통하는 주요 산간 도로 통로에 대한 통제력 장악도 중요했다. 중국은 1962년 인도와 벌인 전쟁으로 카슈미르 동부 산들의 통제력을 확보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당시 카슈미르의 지배자인 번왕은 이 나라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독립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파키스탄 군대의 명령을 받은 부족민들이 카슈미르 북부를 침략했다. 그래서 왕은 서둘러 인도에 편입하기로 했고, 인도 군대는 파키스탄군을 저지하기 위함이라며 '합법적으로' 카슈미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었다.

네루는 비민주적인 힌두계 왕이 내린 카슈미르의 인도 편입 결정을 '훗날' 카슈미르인들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훗날'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카슈미르는 조차지로 간주됐다. 카슈미르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인도 헌법 370조는 이때에 생겨난 것으로, 오늘날 힌두교 국수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이 조항을 몹시 싫어한다. [현 인도 총리 모디의 소속 정당이 바로 인도국민당이다.]

[카슈미르를 침공한] 파키스탄 군대는 인도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1949년에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맺어졌다. 오늘날 인도령 카슈미르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로 나눈 '통제선'은 카슈미르의 지배권을 두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벌인 전쟁 끝에 생겨난 휴전선이다. (그 뒤로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을 두 차례 더 벌였다.) 인도 아대륙의 분할 뒤 40년 동안 파키스탄에 편입되는 것을 지지하는 카슈미르인은 거의 없었다. 1951년 [카슈미르] 선거에서 셰이크 압둘라의 국가협의회가 의석을 모두 차지하고, 친파키스탄 후보들은 한 명도 당선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도 국가는 군대를 철수할 생각도, 카슈미르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뜻도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군대가 시위대에 발포하다

1953년 인도 중앙정부는 셰이크 압둘라를 몰아내 구속할 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셰이크는 그 전에 폭넓은 토지개혁 법안을 제정해, 카슈미르 지주들의 권력을 파괴하고 카슈미르인들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국민당은 이 토지개혁 법안을 증오하고 있다.

압둘라의 구속은 20일간의 총파업을 촉발했다. 총파업이 벌어지는 동안 인도 군대는 계속 시위대에 총을 쏴 1000여 명을 죽였다. 6년 뒤 압둘라가 석방됐을 때, 1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그를 환영했다. 압둘라가 중국을 방문한 뒤 다시 구속되자 총파업과 시위가 벌어졌고, 체포와 탄압이 뒤따랐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분노도 커져 갔다. 파키스탄은 1965년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고, 봉기가 일어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카슈미르 정서를 잘못 파악한 것이었다. 카슈미르에서 벌어진 운동은 비민주적인 파키스탄에 편입되고자 하는 염원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

"인도도 파키스탄도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1972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심라 협정이 체결되고 휴전선이 새로 그어졌다. 양측이 휴전선을 존중하기로 합의하면서 카슈미르 분할은 기정사실이 됐다. 셰이크 압둘라가 석방돼, 1977년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총리로 재선출됐다. 그러나 이때의 압둘라는 인도와 화해할 태세가 돼 있었다. 셰이크 압둘라 정권은 갈수록 부패해졌으며, 1982년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파룩이 손쉽게 집권했다. 점점 많은 카슈미르인들이 정권의 부패로 좌절감을 느꼈으며, 일자리 부족 — 특히 교육받은 카슈미르인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 과 압둘라 정권의 권위주의는 그 좌절감을 키웠다. 동시에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는 체계적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1980년대 동안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에 점점 더 많이 개입해, 선출된 정부를 해산시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경 반무슬림 성향의 인물을 카슈미르 총리에 앉혔다. 1987년의 선거 조작은 깊은 실망감을 자아냈다. 인도에 맞선 거대한 반란은 1989년에 다시 시작됐다. "베틀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통제선도 무너뜨릴 수 있다." 반란에 참여한 사람의 말이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재통합을 원하지 않았다. 소련과 중국은 카슈미르의 독립 운동이 성공해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했다.

1990년 인도 군대가 스리나가르에서 시위대 100명을 학살하자, 반란은 카슈미르 계곡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약 40만 명이 행진했고, 그다음에는 100만 명이 행진했다. 그 가운데 40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카슈미르의 젊은 세대는 투쟁하기로 결심하고 게릴라전을 시작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좌절감의 반영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79~198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에 대항해 무기와 지원병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 버린 상황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래서 체게바라에 고무돼 카슈미르 독립을 위해 싸우던 게릴라들과 나란히, 파키스탄에 편입되기를 바라며 투쟁하는 이슬람 게릴라 그룹도 있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정보기관 ISI를 통해 여러 단체에, 특히 라쉬카르 이 카이야바(Lashkar-i-Tayyaba)와 하르카툴 무자헤딘(Harkatul Mujahadeen)에 돈과 무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젊은 카슈미르인들을 파키스탄과 지하드 단체의 품으로 몰아넣은 것은 인도 군대의 탄압이었다.

독립 투쟁

인도 군대는 영국에게서 배운 고전적 폭동 진압 전술들을 활용했다. 인도 중앙정부가 임명한 반(反)무슬림 성향의 카슈미르 총리는 이렇게 선언했다. "오늘날 카슈미르에 사는 무슬림은 모두 전투원이다. … 카슈미르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총알뿐이다. 전투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카슈미르 계곡의 정상 상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에 약 60만 명의 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했다. 당시 카슈미르는 인구 대비 군인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카슈미르인 7만 명이 학살당했다. 대량 체포와 실종이 발생했고, 고문과 강간이 횡행했다. 1995년 실시된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는 카슈미르 인구의 75퍼센트가 독립 투쟁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봉기는 오로지 카슈미르에 집중돼 있었다. 봉기가 시작되자 약 14만 명이나 되는 힌두교도들이 카슈미르에서 도망쳐 나왔다. 부자들은 델리에 있는 자신의 두 번째 집으로 갔지만 그 나머지는 잠무의 열악한 난민수용소로 갔다. 1980년대 말에는 라다크에서 무슬림과 불교도들의 충돌이 일어났다.

게릴라들은 인도 국가를 물리치지 못했고, 카슈미르인들은 지쳐 갔다. 게릴라들은 약탈하고 서로 분열하고 무작위적 폭력 행위를 벌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멀어져 갔다. 2001년 타리크 알리는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이렇게 썼다. "게릴라 단체들은 서로 죽이고 서구인 관광객을 납치했다. 그리고 카슈미르의 힌두교도들을 수세기 동안 살던 고향에서 내쫓았다. 또 가끔 인도 군인이나 관료들을 해치웠지만, 일부 무슬림을 세속적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처벌했다." 오늘날 세속적인 반정부 세력들은 주변적 지위로 내밀리고 있다.

지하드 세력이 운동의 지도력을 장악하면서 힌두교도나 불교도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파키스탄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무슬림들이 카슈미르를 지배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인도국민당과 힌두교 중심주의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분열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이어야 할까?

사회주의자는 세 가지를 말해야 한다. 첫째,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그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인도 국가의 탄압은 끔찍하고, 그러므로 인도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편입된다고 해서 평화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지주와 군부가 지배하는 나라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국가 모두 카슈미르에서 손을 떼야 한다.

둘째, 카슈미르인들에게는 독립 선택권과 불교도와 힌두교도의 권리 보장을 포함해 진정한 자결권이 제공돼야 한다. 파키스탄 국가는 카슈미르의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단지 말뿐이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독립을 반대하면서 인도나 파키스탄 한쪽에 편입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군사 개입을 통해 카슈미르를 병합하기를 원한다.

셋째, 사회주의자는 카슈미르의 빈민과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건 힌두교도이건 불교도이건 시크교도이건 상관없이 단결할 필요를 강조해야 한다. 발루치스탄(파키스탄 서부의 주) 사람들은 1970년대에 파키스탄 국가에 맞서 싸울 때 이 점을 잘 이해하고 발전시켰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자결권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주들과 착취자들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자결권을 위해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분할의 유산으로, 인도 아대륙 사람들은 종교와 민족을 근거로 분열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은 계급투쟁을 통한 단결을 건설함으로써 그런 분열을 박살 내는 것이다.

출처 〈소셜리스트 리뷰〉 2002년 2월호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와 운동의 쟁점들
★ 20대 청년 모욕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 버니 샌더스 '민주사회주의' 열풍
★ 광화문 세월호 천막 곧 철거된다

3·1운동의 진정한 성격과 오늘을 위한 시사점

김동철 《마르크스주의로 본 한국 현대사》 공저자

1919년 들어 식민지 조선(한국)의 공기는 심상치 않았다.

당시 조선 총독 데라우치는 이렇게 불안함을 토로했다. "요사이 경상도, 함경도 등 여러 도에서 다수 인민의 소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사정은 대단히 우려할 현상이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지 불과 9년 만에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거센 저항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1919년 그날

1919년 3월 1일 새벽부터 서울 시내의 거리 · 학교 곳곳에 유인물이 뿌려지고 대자보가 나붙었다. 경찰이 안간힘을 썼지만, 궐기를 촉구하는 선동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오후 2시 많은 사람들이 탑골공원에 모였다.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한 청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공원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았고 학생들도 교문을 나와 대열에 합류했다.

총독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날 경성(서울) 거리는 솜을 깐 것 같이 군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3월 1일 시위는 서울을 비롯해 주요 도시 7곳에서 벌어졌고, 곧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서울의 투쟁은 시위를 주도한 청년 · 학생들이 대거 검거되면서 잠시 주춤한 듯했다. 그러나 3월 22일 노동자대회가 열리자 서울에서 시위가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됐다. 3월 26~27일에는 전차 · 철도 노동자, 만철 경성 관리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투쟁 분위기가 더 달아올랐다.

부산에서도 4월 들어 시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진 듯했으나, 4월 20일 부산 조선와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데 이어 부산 · 동래 · 마산 등지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파업을 벌이면서 투쟁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농촌 지역의 경우, 시위대가 행정을 아예 마비시키거나 면사무소가 시위대에 접수돼 운동 사무소로 이용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예컨대 순천군 신창에서는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접수해 '대한독립운동준비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3월부터 5월에 집중된 시위에 참가한 사람의 수는 200만 명이 넘었다. 당시 인구가 2000만 명인 걸 감안하면 시위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일본은 운동의 기세에 당황했다. 그러나 곧 탄압에 나섰다. 탄압 과정은 만행 그 자체였다. 1919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일까지 7000명 이상이 죽었고 체포된 자만 4만 명이 넘었다.

잔혹한 탄압 끝에 조선(한국) 전체를 뒤흔든 저항의 기세는 수그러들었지만, 3 · 1운동의 여파는 오랫동안 식민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전쟁과 혁명

3 · 1운동에 대한 정부와 주류 역사가들의 해설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인 윌슨(1856~1924)이 민족자결주의를 발표하면서, 그 영향으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을 계획했고 이들의 주도로 3 · 1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3 · 1운동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협소하다. 3 · 1운동은 제1차세계대전(1914~1918)과 이후에 벌어진 국제적인 혁명의 물결 속에서 일어났다.

제1차세계대전은 혁명 덕분에 끝났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1년 뒤 독일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독일 황제를 타도했다.

혁명의 물결은 식민지 반란으로도 확대됐다. 191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영국에 맞선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1919년 5 · 4운동이 일어났고, 1925~1927년에는 노동자 혁명이 일어났다. 3 · 1운동은 이 거대한 물결의 일부였다.

사실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이 선언한 '민족자결주의'는 러시아 혁명을 의식한 조처였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 혁명 정부가 주장한 민족자결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사진 출처 독립기념관

1919년 3·1운동 당시 탑골공원 앞에 모인 사람들

윌슨은 민족자결권 적용 범위를 패전국의 영토와 그 식민지로 국한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가 독립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식민지 민족주의자들에게 기대를 심어 준 것은 사실이었다. 1919년 3월 독립선언을 조직했던 인사들 다수가 그 선언과 만세 시위를 강대국들(특히 미국)에 청원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까닭이다.

물론 그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이 3 · 1운동을 탄압하는 와중에, 미국 국무부는 조선의 "소요"에 대해 일본이 특별히 잔인무도한 조처를 취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누적된 불만

1910년 이후 국내에서 일어난 변화도 3 · 1운동의 배경이 됐다. 일본은 동학농민항쟁 등 거듭되는 저항을 내리누른 끝에,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

'병합' 이후 일본은 소위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보안법과 집회 관련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자극'할 모든 단체와 간행물을 금지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조선에도 변화가 일었다.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리며 경제 호황을 맞았다. 그러자 조선에서도 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되고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노동자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호황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1910년 8월을 100으로 했을 때, 1918년의 물가지수는 235였는데 공장 노동자들의 노임지수는 120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민족적 천대와 가혹한 착취에 시달렸다.

농민들도 전쟁 탓에 늘어난 조세와 쌀 수탈로 고통을 겪었다. 농가 1호당 조세부담액은 1915년에는 6원이었는데, 1920년에는 13원으로 급등했다. 당시 농민의 압도 다수는 빈농층이었는데, 그들은 근근이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 속에 불만이 누적돼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3 · 1운동이 바로 그 폭발의 계기였던 것이다.

분화

3 · 1운동은 제국주의에 맞서 정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민중 항쟁이었다. 3 · 1운동은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으로 3 · 1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대토지를 지키려는 조선인 지주와 해방되면 토지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소작농의 처지가 같을 수 없었다. 조선인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도 같을 수 없었다.

운동의 분화는 필연이었다. 3 · 1운동은 가장 억눌려 온 계급들에게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사회주의 조직도 등장했다.

특히 노동운동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1920~1930년 사이에 벌어진 노동쟁의는 891건으로 191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성장한 노동운동은 (비록 패배하지만) 1929년 원산총파업으로 절정을 맞이했다.

이전에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일본인 공장에서뿐 아니라 조선인 공장에서도 파업했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이것에 대응해야 했다. 기층 대중운동이 성장하자 조선인 자본가 · 지주들은 일본 권력과 더욱더 유착했다. 이 점이 1920년대부터 민족주의자들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주된 배경의 하나였다.

3 · 1운동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억할 저항의 전통이다. 여전히 제국주의가 현실의 중요한 문제인 오늘날, 그 전통을 진정으로 기념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계급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구

요즘 민주당과 온건 진보 측 다수는 3 · 1운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그 임시정부에 있다고 본다.

임시정부(와 그 핵심 인사들)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타협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단체였다.

그리고 3 · 1운동 당시의 급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정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당시 민족 해방운동의 유일한 대표라고 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내부 분파 갈등으로 제대로 활동하기조차 어려웠다.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강대국(특히, 미국)과의 외교를 통한 독립을 꾀했다. 동아시아 외교의 중심지인 상하이에 자리잡았던 까닭이다. 그러나 서구 열강에 대한 임시정부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 노선은 임시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대오를 분열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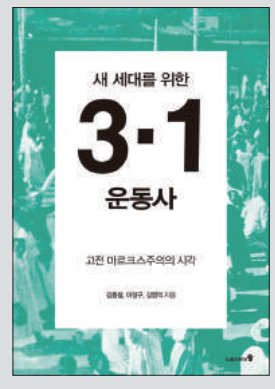
1941년에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본 전쟁에 참가할 수 있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 그룹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다. CIA의 전신인 미국 전략첩보국(OSS)이 임시정부의 광복군 대원을 선발해 특수훈련을 시켰지만, 미국은 이 일을 임시정부 승인과 연결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지만 임시정부는 그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미국은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하면서 자신 이외의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 1운동 이후 임시정부만 등장한 게 아니었다. 많은 청년이 각성하면서 수많은 투사와 단체, 특히 사회주의 조직들이 등장했다. 무엇보다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대중 운동이 부상했다. 이들이 민족 천대와 계급 착취에 동시에 맞서며 민족 해방 운동의 주력 구실을 했다. 3 · 1운동의 진정한 계승을 논한다면 임시정부보다 이들을 먼저 언급해야 한다.

추천 소책자 새로 나왔습니다



새 세대를 위한 3·1운동사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시각
김동철, 이정구, 김영익 지음, 노동자연대, 72쪽, 3,000원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최미진

이 글은 2017년 12월 7일자 본지 기사 '낙태권 운동 —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를 재게재한 것이다. 지금 시점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 올해 4월 초로 예상되는 낙태죄 헌재 심판 관련 새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사진 이미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낙태 금지는 여성의 건강과 삶을 해칠 뿐. 이게 무슨 "생명 존중"인가?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첨예하다.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낙태죄 폐지 운동도 성장해 왔다.

반면, 낙태 반대 세력의 반격도 있다. 지난해 천주교의 전국 16개 교구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명동성당에서 '생명 수호' 미사를 주례한 뒤, 첫번째로 서명했다.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이고 "인간[태아]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여성차별의 발로일 뿐이다. 염 추기경 주장과 정반대로, 태아는 모체에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 하는 여성 신체의 일부이지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다. 따라서 "태아의 권리"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이미 자신의 삶을 사는 인간인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 태아의 인큐베이터로나 보는 견해일 뿐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에게 낙태 결정권 없이도 여성이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은 공문구일 뿐이다. 여성해방 운동의 오랜 구호처럼,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도 자신이나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데 필사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치명적 상처를 입거나 뒷골목에서 죽어 가야 했다. 이게 무슨 "생명 존중"인가?

낙태는 살인?

낙태 반대론자들은 여성들이 피임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낙태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피임이 낙태보다 더 간단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더 낫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완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임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어떤 경우든 여성의 낙태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

한국에서 병원 낙태 시술은 광범하게 이뤄져 왔다. 처벌된 비율도 매우 낮다. 하지만 불법이기에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고, 단속이 강화되면 그 비용이 폭등한다. 이는 여성에게는 낙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불법 낙인이 두려워 낙태 사실을 쉬쉬해야 하고 낙태 후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일해야 한다.

이처럼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직시한다면, "태아 생명권" 운운하며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해선 안 된다.

낙태 금지가 미치는 영향은 계급에 따라 상이하다. 낙태죄 수호 운동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힘 없고 가난한 여성들을 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가 불법이어도 자신의 부를 이용해 안전한 시술을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급과 가난한 여성들, 여성 청소년들의 현실은 다르다. 서구에서 낙태가 불법인 시절 가난한 여성들은 위험천만한 뒷골목 낙태로 내몰렸다. 한국에서도 낙태 단속 · 처벌이 예고될 때면 노동계급 여성들은 치솟은 낙태 비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아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아픈 몸을 끌고 출근해야 한다.

더럽고 차디찬 화장실에서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결국 문제는 위험하고 값비싼 낙태로 여성들을 내몰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로 여성의 삶과 건강을 보호할 것인가이다.

낙태 반대 세력은 최근 '왜 여성에게만 낙태 책임을 묻느냐'는 여성운동 측의 항변(그리고 청와대 조국 수석의 답변)을 의식했는지, '남성 책임도 강화하자'는 얘기를 들고 나왔다. 염 추기경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폐지 문제를 남성 개개인의 책임 문제로 비틀어, 낙태죄 폐지 요구를 무마하고 국가 책임을 흐리는 본질 회피에 불과하다.

설사 모든 남성이 무책임하다손 치더라도, 국가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해야만 여성의 안전과 삶을 지킬 수 있다. 국가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세계 낙태권 운동의 역사는 이를 쟁취하는 데서 여성과 남성이 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낙태 합법화

한편,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낙태 합법화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가령, 낙태 사유와 기간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것은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된 현행법보다는 낫다. 그럼에도 기간과 사유의 제한을 둠으로써,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결국 국가나 의사 같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여성에게 낙태 결정권을 온전히 주는 게 아니다.

상담 절차 의무화도 지지하기 어렵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선택을 어렵게 하는 수단으로서 상담 의무를 이용해 왔다.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도 반대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에게 낙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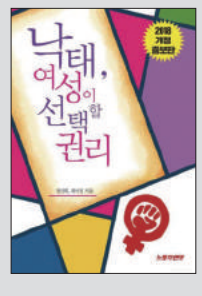
여성의 건강 부담을 이유로 임신 24주 이후의 후기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낙태를 선택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이를 금지하면 오히려 위험한 자가 낙태로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후기 낙태도 처벌해선 안 된다.

여성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임신의 유지 여부는 오롯이 여성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기간과 사유의 제한 없이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낙태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낙태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미프진 등 낙태약도 합법화해야 한다.

추천 소책자



[2018 개정증보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정진희·최미진 지음, 노동자연대, 52쪽, 3,000원

우파의 거짓말 반박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꾸려 3개월간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2월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기관 1205곳 조사)가 드러났다. 하지만 우파들의 비난과 달리, 노동조합과 관련된 비리는 한 건도 없었다. 오히려 고위직 임원의 자녀와 친인척 봐주기가 더 두드러진다.

우파들의 '고용 세습' 비난이 허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우파들은 지난해 10월 '고용 세습' 비난에 열을 올릴 때부터 허위 사실이나 왜곡을 남발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자녀가 '고용 세습'을 했다는 허위 기사를 올렸다가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우파들의 진정한 목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를 비난하고, 미취업 청년과 노동자들을 이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열악한 일자리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도 이롭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는 모두 공공부문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화는 이런 청년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화 규모를 대폭 줄이고, 진정한 정규직이 아닌 자회사 방안을 강요하고, 처우 개선도 미미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게 문제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하는 것이 청년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롭다.

양효영

노동자 연대 wspaper.org
Workers'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을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5만 원, 2년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오른쪽), 후안 과이도(왼쪽),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두케(가운데)가 리마그룹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 간섭 말라

문재인 정부의 과이도 지지 규탄한다

김준효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2월 23일 베네수엘라 우파와 일군의 무장세력들은 미국 등이 보낸 물품을 국내 반입하겠다며 콜롬비아 국경 인근에서 베네수엘라군과 충돌했다.(같은 시각 브라질과 인접한 반대편 국경에서도 물품 반입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인도적' 물품이 실렸다는 차량에 불을 질러 돌진시키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적어도 4명이 사망했다. 서방 언론과 우파는 마두로 정부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대서특필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는 이 충돌을 빌미로 마두로 정부를 흔들고 있다. 마두로 정부가 굶주린 대중에 돌아갈 물품을 총칼로 막는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이래 매점매석과 투기로 생필품 품귀를 부추긴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끔찍하다. 물가인상률이 일곱 자리수일 것이라는 관측이 보편적이고, 베네수엘라인 10명 중 1명이 경제 난민이 됐다.(단순 숫자로는 내전 중인 시리아에 버금가는 규모다.) 떠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배급에 의존해 아등바등 살아간다.

경제 제재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미국과 서방의 '인도주의' 운운은 위선이다. 이들이 베네수엘라 대중을 진정 걱정한다면 모든 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생필품 수입을 원활케 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압박을 늦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원 물품 반입 퍼포먼스조차 베네수엘라인들을 자극하고 외부 개입을 도모할 기회로 삼으려 한다.

베네수엘라인들을 위한다며 떠드는 과이도 자신이 압박 강화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2월 23일 콜롬비아로 월경(越境)한 과이도는, 25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그룹 회의*에 참석해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며 사실상 미국의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트위터에서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며 맞장구쳤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의 친서를 들고 리마그룹 회의에 참가해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펜스는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베네수엘라에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직후 미국 재무부는 마두로 지지 베네수엘라 주지사 4명에게 추가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

정권 교체 속셈

미국은 이번 기회에 베네수엘라 정권을 교체하려 벼르고 있다. 마두로를 퇴진시키고 과이도 같은 친미 우파를 후임으로 앉히면, 2000년대 "핑크 물결" 이래 손상됐던 역내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속셈이다. 베네수엘라와 이웃한 경제대국 브라질에서 친미 우익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집권한 지금이 그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는 듯하다. 경제 제재로 베네수엘라 정부·군부 주요 인사들을 강도 높게 압박해 사실상 쿠데타를 부추기는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미국이 마두로 정부의 대화(평화 협상) 요청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응한다면 꼼수와 시간 벌기용일 것이다.

미국이 2월 26일(현지 시각)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유엔 감시 하의 대선 재선거 실시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압박 강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어깃장을 놓고 나섰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일관되게 옹호할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미 러시아의 주요 은행 가즈프롬방크는 PDVSA의 주요 외화 거래 계좌를 개설 1주일 만에 동결했다.

가즈프롬방크는 미국의 금융 제재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존의 마두로 지지 입장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가즈프롬방크 모회사인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이 PDVSA와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 경쟁 관계라는 점도 그런 셈법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잇속을 따지기로는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물론, 강경한 마두로 반대 입장인 브라질 부통령 아미우통 모랑은 25일 리마그룹 회의에서 "군사적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섰고,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브라질 영토를 이용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미 군부 독재 하에서 출세한 호전적 전직 장성 모랑이 평화 때문에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과의 공조 하에) 영향력을 늘리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따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셈법 안에는, 브라질 국영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세계 시장에서 PDVSA와 경쟁 관계라는 점도 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 (경제적 정쟁을 지정학적으로 비화시키는) 제국주의적 의도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사태가 이런 자들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베네수엘라 대중은 끔찍한 반동과 탄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제국주의 편에 서서 반동적 우파를 두 차례나 지지하고 나선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베네수엘라 진보 정권 전복하려는 우파 지지하다', 본지 웹사이트 참조)

그런 반동이 관철된다면, 우고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걸고 추진한 모든 친서민적 개혁의 잔재마저 분쇄될 것이다.

인기 영합?

우파와 기성 언론들은 그런 사회 개혁들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 속에서 일관성 없는 인기 영합('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조소하지만, 이는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진보연대가 우파의 쿠데타 시도와 제국주의 간섭에 대한 규탄 한 마디 없이 우파와 똑같은 논리로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한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차베스 개혁은 기업 수익을 복지에 대거 할애한다는 점에서 명확히 반기업·친서민적 정책이었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인 넷 중 하나 정도 되는 빈곤층의 삶을 어느 정도는 개선했다.(국제유가 고공 행진 덕을 보기도 했다.)

차베스 개혁은 또한 좌파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이었다. 비록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를 이용해 위로부터 개혁을 추진한다는 뜻이었고, 기존 사회관계는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전혀 혁명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를 인기 영합주의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가 침체로 빠져들면서, 차베스의 후임인 마두로 정부는 노동자 대중의 편에 서기보다는 베네수엘라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선택**을 했다. 그 때문에 자본가들은 자신감과 사기가 올랐고, 노동자 대중은 위축되고 위기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즉, 오늘날 베네수엘라 위기는 좌파 개혁주의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 내** 개혁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선택 속에서 실패하고 위기에 빠진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274호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회주의 때문일까?')

개혁의 성과를 파괴하려 드는 우파와, 이를 후원하는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집권한 (진보적) 정부의 실패를 넘어 진정한 대안을 건설할 **독립적** 노동자 대중 행동을 고무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우파의 시도를 좌절시킬 진정한 힘은 베네수엘라 서민 대중의 단호하고 독립적인 저항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용어설명

리마그룹 회의

2017년 8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과 캐나다가 페루 수도 리마에 모여 마두로 정부 불인정, 우파 주도 국회 지지 등을 결의한 '리마선언'에 기초한 회의.